

박상섭, 『국가·주권 State/Sovereignty』*

—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토착적 개념의 형성을 위한 조건 —

한승완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근 학계에서는 우리의 근대 초기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도 여러 저술로 발표되고 있다.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근대와 탈근대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담론이 이 시기를 재조명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가장 큰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양의 관련 담론을 수입,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근대성의 기원’을 그 뿌리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사유하려는 시도는 그 주의 주장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학문의 토착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일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세계화와 함께 심화되는 지역적 경제 통합의 시각이든 아니면 시민 사회적 대안 질서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든 동아시아가 주목받게 되면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근대를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공간적 관점의 확대가 동시에 우리의 근대에 대한 논의의 심화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와 연관하여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학문의 토착화라는 문제 의

* 박상섭, 2008, 『국가·주권』(한국개념사총서2), 도서출판 소화.

식에서 근대 학문에서 사용되는 개념어의 형성, 변천에 대한 연구 흐름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의 인문·사회과학이 아직도 수입상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학문적 자성이 일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탈식민적' 글쓰기, '우리말로 철학하기' 등이 시도된 적이 있다. 하지만 개념과 현실의 유리(遊離)를 직접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 극복하려는 시도도 유의미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문적 개념어들이 어떻게 수입, 형성, 변형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개념사 작업도 궁극적으로 학문의 토착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보이며, 아마도 보다 유효한 시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연구 인력의 학제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최근 정부나 공공적 성격의 학술 지원 재단이 이러한 개념사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이제 서서히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박상섭 교수의 『국가·주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 학계의 연구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는 우리가 국가와 주권이라는 개념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여 서술하고 있다. 우선 그는 서양에서 역사적 전통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국가 개념의 형성과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어 동양의 한자 문명권에서 국가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과거 역사 기록물에 나타난 국가 개념의 용례와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에서 새로운 국가 개념의 형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양에서 국가 개념 형성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논의가 곧 중국과 일본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국가 개념의 특성에 대한 규정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는 것이다. 서양에서 국가라는 개념의 시대에 따른 변화와 함께 저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서양 근대에서 지역에 따라 국가에 대한 논의의 관심도와 성격, 지향점이 달랐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절대주의를 안정적으로 확립한 영국에 비해 오랜 기간 통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독일에서 국가 개념에 대한 접근이 달랐음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

영국에서 강력한 국가의 실존(實存)이 국가라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논의의 부재(不在)를 가져왔던 반면, 독일의 현실에서 국가의 부재는 오히려 국가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분출을 가져오고 결국 '국가학(Staatslehre)'의 성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동아시아 근대가 주목한 국가의 지향은 바로 이 독일의 '국가학' 전통의 영향 하에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이 독일 전통의 국가 개념에 매력을 느끼고 그에 따라 근대화 전략을 구상하던 배경으로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유용성'과 '동아시아 전통적 국가 개념과의 친화성'이라는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개인의 이익과 보호를 우선에 두는 개인주의적 전통과 달리 독일에서 국가는 하나의 '윤리적 실체'로 고양되어 그 자체가 최고의 자기 목적을 갖는다고 보는 국가유기체설이 지배적인데, 이는 국가를 '확대된 가족'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유와 친화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개인보다는 국가라는 전체가 우선한다는 사유에서 양자는 친화적이다. 나아가 국가가 우위에 서서 근대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고려에 따른 이론적 선택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서양의 특정 국가 개념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우리의 국가 개념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평가한 후, 2부에서 '주권'에 대해 독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자신이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 국가의 이론은 곧 주권의 이론"이었다. 따라서 국가를 서술하면서 주권에 대한 서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2부는 1부에서 주권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서술된 내용이 심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먼저 근대 유럽에서 주권 개념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고 이어 우리의 근대 시기 서양 주권 개념의 도입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 요점은 김윤식(金允植)의 '양편론(兩便論)'이나 유길준(兪吉濬)의 '양절체제(兩截體制)'로 표현되는 당대의 주권 개념이 한편으로 중국과의 전통적 조공 관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근대적인 국제법적 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제시되지만, 이

후 이러한 초보적 형태의 주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전시키는 논의가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의 국가와 주권 개념에 대한 이러한 서술에 일관된 기본적인 관점은 인문·사회과학적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현실과 개념의 관계’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특정한 현실을 개념적으로 포착하는 용어를 개발하여 자신의 문제를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개념어의 확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강력한 국가의 실존은 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격감시킨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국가의 안정적 존속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에 대한 독립된 논의의 부재를 초래한다. 반면 특정한 현실의 부재가 곧 그에 관한 개념어의 부재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독일에서 보듯이 통일 국가의 부재는 독일 지식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만큼 더 국가에 대한 철학적, 사회과학적 논의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존재 유무가 그에 대한 개념어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자신의 현실 “문제를 독자적으로 개념화하는 능력”¹⁾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한 저자의 논의는 국가와 주권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개념사 일반 및 학문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여러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왕조 국가와 ‘중국적 세계 질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대의 대안적 정치 조직으로서의 새로운 국가 형태에 대한 사고는 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이 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바로 왕조 국가와 ‘중국적 세계 질서’의 안정성이 위기에 직면하는 시기이며, 그것이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19세기 말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기존의 전통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대안적 질서가 단순히 가능성으로서가 아니라 서양 각국이라는 구체적인 물리적 힘과 개념으로 주어지는

혼란의 시기이며, 그만큼 개념의 번역, 수입, 변화, 적응이 활발하게 실험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서술하고 있는 유길준의 국가 개념은 이러한 위기와 혼란 속에서 하나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국가 개념은 한편으로 ‘중국적 세계 질서’로부터 벗어나 자주성을 갖는 근대적 주권국가로서의 조선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내부의 질서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유교관에 기초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전통적 국가 개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도입한 근대 국가 개념은 서양에서 이 개념이 형성되는 다양한 ‘컨텍스트’가 추상된 채 텍스트만 ‘완제품의 형태’로 차용된 개념에 불과하며, “아직 현실로부터 소외된 개념일 수밖에”²⁾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소외되지 않은 개념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 즉 “문제를 독자적으로 개념화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자는 이에 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소외되지 않은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개념화 능력’은 학문의 토착화라는 주제에서 보면 핵심적인 문제이다. 현실과 개념이 직접적으로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라는 현실과 (비록 아직 우리의 현실은 아니지만) 대안적 질서라는 현실이 부딪치는 국면에서 새로운 개념화 시도가 출현할 조건이 주어진다. 이로써 객관적 조건은 충족된 것일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이 그것이 출현한 장소의 구체성이 소거된 탈맥락적 ‘완제품’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서술하고 설명하는 개념이 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주체적 조건에서 찾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평자가 보기에 저자는 이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답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범위와 심도에 대한 저자의 지적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본문의 적은 부분과 각주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결정적인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사회 전

1) 박상섭, 2008, 앞의 책, 178쪽.

2) 박상섭, 2008, 앞의 책, 141쪽.

체 수준에서 새로운 논의가 수용되고 토의되는 규모를 지적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다음과 같은 단편적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은 해적판을 포함하여 약 25만 부가 출판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 (유길준의-평자) 『서유견문』은 자비로 출판한 초판 1천 권이 정부고관과 유력자들에게 기증되었다고 한다.”³⁾

새로운 개념의 형성, 혹은 새로운 논의 속에 기존의 개념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이렇게 광범위한 규모의 사회적 공론장 차원에서 토의될 때, 그 개념은 이 토의 과정에서 수정, 변형을 거쳐 소외되지 않은 개념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자는 일본에서 근대 학문 개념들, 특히 우리의 맥락에서 보면 국가와 주권 개념이 현실과 유리되지 않고 토착화된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적 시도를 하는 저작이 수십만 부 유통되는 상황은 그것이 아카데미즘의 세계를 넘어 일반 공중의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토의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개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개념은 그 사회 현실에 적절한 개념으로 수정, 변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광범위한 비판적 공중은 자유로운 사고 실험과 개념 형성에 필수적인 주체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시기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와 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가 저자의 작업에 이어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일부 서술의 내용이 반복되어 책의 완성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관한 논의에서 상당 부분 전개되었던 내용이 주권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재판을 발행할 경우 단순 반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2부에서의 서술은 주권에 대한 심화된 내용에 한정시킨다면, 보다 완결된 형태를 가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주 19와 주 69는 동일한 내용이고 전거도 같으므로, 둘 중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박상섭, 2008, 앞의 책, 140쪽.